

지방-중앙정부 4대강 대충돌 조짐

野 단체장들 “행정권 총동원 저지” 정부 “雨期 앞두고 공사중단 없다”

野 당선자들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민주당 등 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4대강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야당의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을 놓고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이 대충돌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6일 지방정치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야권 광역단체장들이 4대강 사업 저지 결의를 밝힌 데 이어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장은 준설토 적치장 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강바닥에서 파낸 흙으로 인근 농지를 성토하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사업 허가를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권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이 사업의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데다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있어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 저지에 가장 적극적인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안희정(총남)·김두관(경남) 당선자다. 민주당 안 당선자는 이날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4대강 사업과 세종시에 대한 민심은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두관 당선자도 “생명과 사업이냐 환경 대제약인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해 도지사로서 가진 인·허가권 등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운태(광주)·이시종(충북) 당선자도 정부 방식의 4대강 사업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강 당선자는 “보를 설치하고 준설토를 하는 지금 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며 “영산강은 개발보다는 수질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도 “보를 막아 운하를 만들거나 배가 다니도록 준설토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다만 치수개념은 찬성한다. 소하천·세천 등 하천 정비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염홍철 대전시장 당선자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대전전, 유등천, 감천 등과 같은 지천 복원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 박준영 전남지사 당선자는 “영산강은 그대로 놔두면 퇴적물만 쌓이는 죽은 강이 되어 버린다. 수질을 개선해 깨끗한 강물이 흐르게 하고 매년 겪는 홍수를 예방하려면 정부의 4대강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 단체장과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반면에 한나라당 소속인 서울·경기·대구·경북·부산·울산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은 4대강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김관용 경북지사 당선자는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처럼 소속 정당 등에 따라 입장이 갈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7월 소속 시·도지사 당선자 7명을 참석시켜 관련 워크숍을 열겠다는 일정을 밝혔고 조만간 무소속 김두관 당선자까지 참여하는 야권 광역단체장 협의체를 구성, 이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산강 인접 기초단체장 당선자 ‘영산강 사업’ 입장

목포 정종득 “목포항만 수질개선 도움돼야”

정종득 목포시장은 “4대강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만큼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목포시는 4대강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직접적 언급을 피했다.

정 시장은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하나



로 추진되는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 “목포항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저층수 배제시설이나 배수갑문 확장 과정에서 반드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뒤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주 임성훈 “수질개선에는 근본적 찬성”

임성훈 나주시장 당선자는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를 예방하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자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임 당선자는 그러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 당선자는 “오염된 영산강을 살리는 것은 지역민들의 오랜 바람”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산강을 끼워넣다보니 이같은 논란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평 안병호 “함평천 등 소하천 정비는 필요”

안병호 함평군수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함평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 당선자는 “함평천은 영산강 주요 지천으로 함평천 등 소하천 정비가 이뤄져야 영산강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주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지역발전 사업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암 김일태 “깨끗한 농업용수 활용 급하다”

김일태 영암군수는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 “영산강 수질을 개선, 지역 농민들이 깨끗한 농업 용수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살아보면 농민들의 심정을 알 수 있다”면서 “영산강 일부 구간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군수는 “4대강 사업의 보(浚) 건설과 하천 준설을 놓고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의 기자회견이 6일 민주당 광주시장 사무실에서 열렸다. 강 당선자는 ‘시민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 민선 5기 시정을 꾸려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일 못한 간부 책임 묻겠다”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 “매주 금요일 시민과 대화”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는 오는 7일부터 ‘민선 5기 출범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강 당선자는 민선 5기 모든 시정의 가치 기준을 ‘시민이 행복을 위한 행정의 3대 원칙’으로 여겨지는 법규와 중앙지침, 관행을 뛰어넘어 시민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항이 있다면 법을 고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당선자는 당선 이후 양동시 상인연합회 등 시민을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당선자는 “해의출장과 중앙정부 방문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시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민선 5기에는 광주시민 누구나도 시장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청 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그 결과를 시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강 당선자는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행정의 3대 원칙으로 여겨지는 법규와 중앙지침, 관행을 뛰어넘어 시민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항이 있다면 법을 고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당선자는 당선 이후 양동시 상인연합회 등 시민을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당선자는 “해의출장과 중앙정부 방문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매주 금요일 시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민선 5기에는 광주시민 누구나도 시장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발탁하겠다”고 말했다.

강 당선자는 이어 “이제 쉴새없이 출세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일조하면 자연스럽게 승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며 철저한 성과주의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당선자의 취임 이후에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 등 물갈이가 예상된다.

한편, 강 당선자는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경전철 방식보다 더 좋은 방식이 있는지를 철저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구지역 주변상가 등의 발전을 위해 백운 고가도로 철거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권열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정국대응 온도차

주류측 속전속결 중도파는 조절론

6·2 지방선거에서 승리, 지방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 내부에서 향후 정국 대응 방법론을 둘러싸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주류인 친노 및 386 그룹은 세종시 원안 고수와 4대강 사업 중단 등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속도’를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권심판론의 분위기가 사그라지기 전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대표가 지방선거 직후 내각 총사퇴와 4대강 사업 중단, 세종시 수정안 철회 등 5대요

구사항을 발표한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내세웠던 공약을 슬슬 진행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보다 강력하게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내부의 중도 성향 의원들은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워 정부의 국책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기를 추진한다면 민심의 반발과 외면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니 총선인 7·28 재보선에 패배, 어렵사리 확보한 정국 주도권을 다시 여권에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등에 대해 강한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며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갖고 후반기 국회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주류 정국 대응 기조에 대한 입장 조율이 나선다. /임동욱기자 tuim@

제주도가 더 가까워집니다.

7월2일-16일 오렌지호 취항기념 특가

- 1. 대량해 제주관광 1박2일 ₩99,000~
- 2. 대량해 제주관광 2박3일 ₩119,000~
- 3. 시원해 제주골프 1박2일 ₩240,000~
→ 라벤드골프텔 37평형(4인1실)
첫해날 : 라벤드CC 18홀 / 둘째날 : 천하산 CC 18홀
- 4. 내맘대로 자유여행 2박3일 ₩79,000~
→ 정복신박(차량신박) + 편선 2박 (비즈니스가게)

☎ 예약문의 : 062-515-2231 062-973-9114 062-269-9363

주요 제휴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주요 제휴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초 쾌속 오렌지호 취항
장흥 노륙항 - 제주 상산항
배임 2회 운항 (1시간 40분 소요)

7월2일-16일 오렌지호 취항기념 특가

- 1. 대량해 제주관광 1박2일 ₩99,000~
- 2. 대량해 제주관광 2박3일 ₩119,000~
- 3. 시원해 제주골프 1박2일 ₩240,000~
→ 라벤드골프텔 37평형(4인1실)
첫해날 : 라벤드CC 18홀 / 둘째날 : 천하산 CC 18홀
- 4. 내맘대로 자유여행 2박3일 ₩79,000~
→ 정복신박(차량신박) + 편선 2박 (비즈니스가게)

☎ 예약문의 : 062-515-2231 062-973-9114 062-269-9363

주요 제휴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